

국정과제 추진현황

국정과제	실천과제	주관	추진현황
50.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	1.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, 채용비리 근절	고용부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2년</p> <p>< 3분기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'22.6.13~7.22. 620개 사업장(전년 547개소, 11.7%) 대상 채용절차법 지도·점검 실시 등 자발적 법 준수 유도 * ▲(자율개선 지도) 1,800개 사업장 대상 채용절차법 준수 자가진단표 및 리플렛 발송 <li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▲(현장점검) 620개 사업장 점검 → 과태료 12, 시정명령 5, 권고사항 준수 안내 106 ▪ 공정채용법 개정 관련 설문조사('22.9.15~10.5)를 실시하여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「공정채용법」 개편 추진 중 <p>< 4분기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공정채용법」 제정을 위한 국민설문조사 실시(9.15~10.5) ▪ 공정채용 우수기업 방문 및 기업·청년 현장 간담회(10.6) ▪ 공정채용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협의체 개최(10.14, 10.28, 11.18.) ▪ 건설현장 내 채용강요 불법행위 지도·점검 실시(10.17~11.30.) ▪ 「2022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」 개최(12.15.) ▪ 불공정채용 관련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조치 추진 중 *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(1,057개) 실태조사(5월) 결과, 우선·특별채용 조항 포함된 63개 단체협약 시정조치→ 42건 개선(12월)
		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3년</p> <p>< 1분기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채용트렌드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조사·발표(3.2.) ▪ 공정채용 컨설팅 운영기관 선정 완료(8개소) 및 참여기업 모집(3.21~) <p>< 2분기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점검(200개소, 4.5~6.30)과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노사관계 불법행위 시정을 위한 점검·감독(건설사업장 400개소 및 건설현장 71개소, 5.12~6.30 집중) ▪ 중소기업의 공정채용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는 공정채용 컨설팅 사업 수행('23.6.30.기준, 150개 중소기업 지원 중) ▪ 일자리 수요 등을 반영한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 착수 <p>< 3분기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채용절차법 하반기 집중 지도·점검 계획 수립*('23.9.8), 연중 수시로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**(400개소)에 대한 점검 진행 중 * 워크넷 채용공고 사업장(200개소), 건설사업장(200개소) → '23.10~11월 점검 진행 중 ** '23.10.13. 현재 400개소 중 275개소 점검 진행(68.5%) ▪ 중소기업의 공정채용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는 공정채용 컨설팅* 실시, 능력중심 채용모델** 개발 및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*** 실시 등 공정채용문화 확산 지원 * (공정채용 컨설팅) 151개 중소기업 컨설팅 진행('23년 150개 컨설팅 목표 달성) ** (능력중심 채용모델) '23년 NCS 소분류 기준 채용분야 중 착용형 스마트기기·방송플랫폼기술·스마트물류 등 10개 신규 분야 개발, 정보보호·e-비즈니스·의료기술 등 10개 분야 고도화 착수 *** (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) 22개 우수사례 발굴(포상) 시상식 (11.1.) <p>< 4분기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기관장 주요인론 대상 인터뷰를 통해 공정채용 당위성 및 입법 필요성 지속 강조 * 채널A '뉴스A LIVE(10.19) 등 장관 직접 설명 등 다수 ▪ 채용절차법 주요 위반 사업장 대상 하반기 집중 지도·점검을 통해

국정과제	실천과제	주관	추진현황
			<p>현장 불법행위 엄정 대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'23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지도·점검 627개소 시행(10.4~11.30, 워크넷 채용공고 사업장 203개소, 건설현장 사업장 211개소,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213개소) ▪ 공정채용 확산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기업의 공정채용 관심도가 제고되는 등 공정채용 문화 확산 기반 마련 * 공정채용컨설팅 제공(151개소),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·고도화(20개 분야) 및 보급(350개소), 기업채용지원 사업으로 평가도구 등(371건) 지원, 공정채용 우수사례 포상(민간 12개, 공공 10개), 가이드북 개편·배포(3,500부) 등 ▪ 불공정채용 관련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조치 완료 *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(1,057개) 실태조사(22.5월) 결과, 우선·특별채용 조항 포함된 63개 단체협약 시정조치→ 전부개선완료(10월) 자율개선 41, 시정명령 후 개선 18, 사법처리 후 개선 1, 유효기간 만료 3 <p>2024년</p> <p>< 1분기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공정채용 컨설팅 운영기관 선정 완료(3.6, 15개소) 및 컨설팅 참여 기업 모집(2월~) ▪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기관 선정완료(4.15, 2개소) <p>< 2분기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공정채용 상담센터 개소(4.1.) ▪ 공공부문 대상 공정채용 설명회 개최(4.16~5.3) ▪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·점검(온라인 채용공고 사업장, 익명신고 등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, 건설사업장 등 629개소, 4.22.~6.28.)
2.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권 보호 강화		고용부	<p>2022년</p> <p>< 3분기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노무제공자 보호) 모든 노무제공자 권리보장 제도화 관련 전문가 논의체 운영('22.7월~) ▪ (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불합리한 처우 개선)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및 컨설팅 지원 * ▶(근로감독) ①사내하도급 기획감독(4월~), ②차별, 파견·사용업체 정기감독(4월~) ▪ (청년 아르바이트 고용상 애로 개선) 청년 아르바이트 애로사항 관련 계약·차별적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추진 * '기간제 단기 근로계약 반복·갱신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('22.6월~)' 중 ▪ (임금체불 신속 해결 등 취약근로자 보호 지원 강화) ①청년 다수 고용 분야 기획 근로감독*, ②영세사업장 대상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·개선 지원을 위한 「현장 예방점검의 날」 운영**(분기별) 등 청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지도·점검 * ▶(연예매니지먼트 근로감독) 총 12개사에서 총 55건의 범위반 적발('22.7.13) ▶(프랜차이즈 근로감독) 진행 중('22년 중 종료 예정) ** ▶ 1차(3.28.~4.1.), 2차(6.20.~6.24.), 3차(9.19.~9.23.) → 7,413개소 지도·점검, 10,320건 개선 지도 ▶ 4차 10.31.~11.4. 실시 예정 - 디지털 대국민 노동행정 포털 구축(스마트 노사누리) 추진 중('22.3월~) * '22년에 구축 진행, 검증과정 등을 거쳐 '23.3월 정식 서비스 예정 - 추석명절 임금체불 예방 및 신속청산을 집중지도* 기간(8.22.~9.8.) 운영(513억 원 청산, '22.9.22.) * 기관장 직접 지도(102회), 체불청산 기동반(69회)을 통해 45억 원 현장해결, 대지급금 315억 원 지원,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14억 원 융자 <p>< 4분기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(265명), 신용채제(438명) 실시 ▪ 사업주 융자제도 개편 관련 「임금채권보장법」 개정안 국회 제출 (12.28.)

국정과제	실천과제	주관	추진현황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청년·영세사업장 등 취약계층 보호 근로감독 * ▶(중소금융업 기획감독)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속 문제가 제기된 신흥MG대상 기획감독 추진(10월~) ** ▶(제4차 현장예방점검의 날) 10.31~11.4간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대상 지원을 위한 교육·홍보 및 지도 → 2,613개소 지도·점검, 4,737건 개선지도 <p>< 1분기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설명절 임금체불 예방 및 신속청산 집중지도 기간(1.2~1.20) 운영 ▪ 「'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(1.18)」 발표 ▪ 「'23년 상반기 취약계층 보호 점검계획(2.14)」 시달 ▪ 중소기업 기획감독 착수(3월~) ▪ '23년 제1차 현장예방점검의 날 운영(3.27.~3.31., 프랜차이즈) ▪ 노무제공자 권리보장 제도화 등을 위한 경사노위 이종구조개선 연구회 논의 개시(2.9~) <p>< 2분기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청년, 영세사업장 등 노동시장 약자 보호 중심 감독* 및 감독행정 역량 강화** * (노동시장 약자 보호) ▲중소금융업(농·수협 등) 기획감독(계속), ▲제2차 현장예방점검의 날 (6.26.~6.30. 숙박·음식업), ▲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(계속) 등 ** (감독행정 역량강화) ▲대국민 노동포털 개통(5월) ▲'23년 스마트 노사누리 사업 추진(4월~, 29억원) ▪ 노무제공자 권리보장 제도화 등을 위한 경사노위 이종구조개선 연구회 논의 지원(계속) <p>< 3분기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청년, 영세사업장 등 노동시장 약자 보호 중심 감독, 추석명절 대비 체불예방·조기청산 대책 추진 * ▲중소금융업(농·수협 등) 기획감독(3월~8월) ▲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(8월~) ▲제3차 현장예방점검의 날 (9.18.~9.27. 소규모 제조업) ** 체불임금 1,062억원 신속청산(44억원 현장해결등), 피해근로자 생활안정지원(대지급금·융자 등 739억원, 13,601명) ▪ 청년층의 다양한 고용형태 수요에 대응한 보호 방안 마련 및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 연구 추진 * 근로자 보호 강화, 차별 사전 예방 등 균등대우를 위한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수렴(8.25) ** 「효과적인 고용상 차별시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」 추진(~'23.10월) ▪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* 추진 * 불합리한 차별·고용구조개선, 파견제도 적정 운영 감독 등을 통한 근로자 보호(9월말 기준 878개소 감독 실시, 목표 1,150개소) - 인력운용 진단, 차별 예방교육·상담 등 현장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지원을 위한 전문 컨설팅 추진(고용구조개선지원단, 차별없는일터지원단) ▪ 노무제공자 권리보장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한 경사노위 이종구조개선 연구회 논의·의견수렴 등 지원(계속) <p>< 4분기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청년 등 노동시장 약자 보호 중심 감독 실시 * 체불근절 기획감독(8~11월), 청년 취약분야 기획 감독(12월~) 등 ▪ 소규모사업장 등의 기초노동질서 준수 지원을 위한 현장예방점검의 날 운영(12.4.~12.8. 편의점) ▪ 전문가(노무사)를 통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도(3~12월 기초노동질서 준수지원 8,985개소, 사업주 노동법교육 10,336개소, 취약분야 컨설팅 300개소) 등 ▪ 노무제공자 권리보장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한 경사노위 이종구조개선 연구회 논의·의견수렴 등 지원(계속)
		2023년	
		2024년	<1분기>

국정과제	실천과제	주관	추진현황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행보 및 간담회(1.4) ▪ 설 명절 대비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수립(1.11) 및 실적 발표(2.25) ▪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계획 수립·시달(1.12) ▪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용자사업 고시 개정(1.16.) ▪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저축은행 등 금융권 차별 수시 감독 계획 수립 및 감독 실시(1.18) ▪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단 컨설팅 계획 수립(1.23) ▪ 근로감독 종합계획 시달(2.5) ▪ 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부처협업 간담회 실시(2.6) ▪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위한 '24년 비정규직 감독계획 수립 및 시달(2.7) ▪ 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실시(3.18~3.29) ▪ '24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신규 선정 공고(3.7) <p>< 2분기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착수(4월~) ▪ 저축은행등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 발표(4.3) ▪ 재직자 익명제보 기반 기획감독 결과 발표(4.15.) ▪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 마련·시행(4.22.) ▪ 노동약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 개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서울(4.29)·부산·대구(4.29)·평택(5.7)·청주(5.7)·광주(5.10) ▪ 고의·상습 체불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착수(5.8.) ▪ 여성 다수 종사 업종을 대상 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(6.17~6.28) ▪ 상습·반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(6.16) ▪ 확정된 시정명령 사업장 등 비정규직 차별 감독 결과 발표(6.25)
3.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	고용부	2022년	<p>< 3분기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 개편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('22.3월~) ▪ ①육아휴직·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,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등 지원, ②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** 등 일·가정 양립 지원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고용부 유튜브, 블로그 및 고용센터 전광판 홍보(1~2월), 언론사 지면 광고(3월), 리플릿 제작 및 배포(4월), SMS 모성보호알리미서비스 운영(매월) 등 ▪ 성별근로공시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용역 추진('22.6월~) <p>< 4분기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성별근로공시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용역(12.16.)
		2023년	<p>< 1분기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등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제도 확대방안 발표(3.28.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) ▪ 육아휴직 급여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,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등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지속 추진(계속) ▪ 공공부문 성별근로공시제 도입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공공기관 통합 공시 매뉴얼 게시·배포(3월) <p>< 2분기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「모성보호 신고센터」를 설치('23.4.19) ▪ 모성보호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노동포털(labor.moel.go.kr)에 「온라인 익명신고센터」를 오픈('23.5.15) ▪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,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, 배우자 출산 휴가 분할횟수 및 급여지원 확대 등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입법예고(5월) ▪ “워킹맘&대디 현장 멘토단” 운영('23.6~'24.5)으로 현장소통을 강화하고, 육아지원제도 관련 홍보자료 배포 등 추진

국정과제	실천과제	주관	추진현황
			<p>< 3분기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모성보호제도 확대)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,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, 재택근무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해 법률 개정 추진* * 입법예고(5.25~7.4) → 규제심사(7~8월) → 법제처 제출(9월) → 국무회의 의결(10.4) → 국회 제출(10.5) -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* 및 '24년 예산안** 반영 * ▲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 추가(1년 → 1년 6월) 부여 및 급여 지급, ▲3+3 부모육아휴직제를 6+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 ** ▲육아휴직 급여: ('23) 1조 6,964억 → ('24안) 1조 9,869억 <+17.1%> ▪ (실질적 사용여건 조성) 상반기 근로감독(23.4.19~6.30) 결과*를 분석(업종별, 규모별)하여 하반기 감독계획 반영(8월) 및 기획감독 추진(9월) * (실적) 500개소 감독, 위반 사업장 100개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3건, 시정지시 109건 -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료 지원제도 신설('24년 예산안 반영) ▪ (모성보호제도 홍보) 모성보호알리미 서비스* 확대(9월부터 월 1회 → 월 2회), “출산·육아지원제도 우수기업 사례집” 배포(7월, 5,000부) 등을 통해 모성보호제도 인식개선 및 홍보 실시 * 건강보험공단의 임신·출산정보와 고용보험정보를 연계하여 근로자(지원제도) 및 사업주(법정의무)에 사전 안내(문자 등)하는 서비스 ▪ (성별근로공시제) '23년 하반기 공공부문 시범운영 등 단계적 도입 지속 추진 <p>< 4분기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육아 초기부터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“3+3 부모육아휴직제”를 확대 개편('24.1.1 시행) ▪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강화(대체인력뱅크* 5개소) * '24년 '인재채움뱅크'로 명칭 변경 ▪ 하반기 모성보호 분야 근로감독 실시(500개소, 기획감독 50개소 포함) ▪ 공공부문 성별근로공시제 시범운영('23.12월~)
	4. 노동기본권 존중,	고용부	<p>2024년</p> <p><1분기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6+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('24.1.1~) ▪ 일·육아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(1.16) ▪ 일·육아양립산단(명칭 변경: 위라벨 행복산단) 발굴을 위한 간담회 개최(1.18, 2.1, 2.14) ▪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 발표(2.26.) <p>< 2분기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'24년 대체인력채용지원 서비스 업무지침 시달(4.11.) - 인재채움뱅크(전용관)신설 및 확대, 고용센터 협의체 운영, 지역 인자위, 대학일자리 센터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 운영 등 ▪ 일·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(5.22. 보도자료) ▪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단체 간담회 개최(6.5.) ▪ 일육아지원제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 간담회 개최(6.14.) ▪ 현장 예방점검의 날 계기 일육아 지원 관련 간담회 개최(6.17.) ▪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시 동료근로자 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(6.18. 국무회의 의결) ▪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100% 지원시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(6.18. 국무회의 의결) ▪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(관계부처 합동, 6.19) ▪ 육아지원을 위한 3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(6.25.) <p>2022년</p> <p>< 3분기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취약·핵심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회의(6.10, 6.30, 9.29)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동향·지도방안 등 점검

국정과제	실천과제	주관	추진현황
	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	2023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공무원·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을 위한 공무원노조법·교원노조법 개정 완료(개정 '22.6.10., 시행 '23.12.11.) - 공무원·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을 위한 경사노위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(총 3회/'22.5.19., 6.16., 9.22.) - 「공무원·교원 노사관계 법제도 실태연구」* 완료('22.9.16.) * 공무원·교원 노동조합 전임자 실태 및 분석,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등 < 4분기 > ▪ 취약·핵심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회의(11.27)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동향·지도방안 등 점검 ▪ 공무원·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 관련 ①경사노위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, ②관계부처 정책협의체 운영, ③노동조합 의견수렴 등 - 경사노위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(12.7.), 관계부처 정책협의체(9.27., 10.11., 10.20.) 및 노동조합법 상 근면제도 설명회(10.26.), 노동조합 의견수렴(10.19., 10.20.),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회 참석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 1분기 > ▪ '23년 취약·핵심사업장 선정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운영 ▪ 공무원·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 쟁점 및 시행령안 검토, 심의위 구성 준비 등을 위해 경사노위, 행안부·인사처·교육부 등 관계부처 간 소통·협업 * 경사노위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3회(2.3., 2.23., 3.31.) 및 수시 관계부처 실무협의 ▪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무원·교원 노사관계 포럼 등을 통해 관련 해외사례 및 주요 현안·쟁점 논의 * 공무원·교원 노사관계 포럼-미국의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논의(3.27.) ▪ 회계·노동법 전문가로 구성된 '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 회의' 구성·운영(1.12.~) * 자문회의 논의 결과 및 정책방향 발표(3.2.) ▪ 노동조합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민당정 협의(3.13.) ▪ 노조의 불법·부당행위를 규율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개정안 김형동 의원 대표 발의(4.3) < 2분기 > ▪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개정안 김형동 의원 대표 발의(4.3) ▪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 연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(6.15) ▪ 취약·핵심사업장 동향 및 교섭지원단 운영상황 점검(4.27, 5.30, 6.26), 지방관서 회의(5.30, 6.26) 등 통해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대응방향 논의 ▪ 공무원·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관련 「공무원·교원노조법 시행령(안)」 입법예고(6.29.~8.8.) < 3분기 > ▪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-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 연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및 소득세법*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(6.15) → 차관(9.14.) 및 국무회의(9.19.) → 공포(9.26.) * 소득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(9.5.~9.11.) - 회계 공시 서식 관련 노조법 시행규칙 입법예고(8.16.~9.25.) → 관보 게재(9.27.) - 1,000인 이상 노조에 리플렛 발송, 오프라인 교육 실시(9.15~9.25), 쏠노조 온라인 교육 실시(9.25~) -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개발완료(~9.30.) ▪ 공무원·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관련 「공무원노조법 시행령(안), 교원노조법 시행령(안)」 입법예고 완료(6.29.~8.8.) ▪ 취약·핵심사업장 동향 및 교섭지원단 운영상황 점검(4.27, 5.30, 6.26, 7.26, 8.25), 지방관서 회의(5.30, 6.26, 7.7, 9.13) 등 통해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

국정과제	실천과제	주관	추진현황
			<p>대응방향 논의</p> <p>< 4분기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 연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·시행(10.1) ▪ 공무원·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을 위한 공무원노조법·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(개정 '23. 12. 5.) ▪ '23년 취약·핵심사업장 체계적인 노사관계 관리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매월 정기적으로 취약·핵심사업장(267개소) 동향 및 교섭지원단 운영상황 점검(10.26, 11.27, 12.21) - 총연맹 및 산별노조 파업, 주요사업장 분류 등에 대해 지방관서 회의(10.30, 12.11) 등 통해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대응방향 논의
		2024년	<p><1분기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'24년 취약·핵심사업장 체계적인 노사관계 관리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취약·핵심사업장 관리지침 마련 및 선정(2.29.) - 매월 정기적으로 취약·핵심사업장(268개소) 동향 및 교섭지원단 운영상황 점검 ▪ 노동조합 회계공시 권역별 설명회 실시(3.4~3.21) <p>< 2분기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'24년 취약·핵심사업장 체계적인 노사관계 관리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매월 정기적으로 취약·핵심사업장(268개소) 동향 및 교섭지원단 운영상황 점검 ▪ '24년 상반기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발표(5.8.) <p>* 1,000인 이상 노조·산하조직 736개소 중 614개소 공시</p>